

쟁점(I):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유

## 정치적 자유에 기초한 자유의 확산

김 용 민(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유주의(liberalism)에는 두 종류의 자유주의가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와 경제적 자유주의(economic liberalism)가 바로 그것이다. 자유주의의 요체는 개인주의인데, 자유주의는 개인을 사회를 구성하는 궁극적이며 환원할 수 없는 단위로 간주하며, 사회를 개인의 관점에서 설명한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지고한 가치로 상정한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자유롭고 평등하다고 상정되는 개인들이 제각기 주장하는 대립되는 요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권력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생성되었다면,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롭지만 평등하지는 않은 이기적 개인들이 시장에서 자신들의 욕망을 달성하려고 애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존 로크가 정치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면, 애덤 스미스는 경제적 자유주의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모두를 중시하지만, 정치적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제도가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에, 경제적 자유주의는 자유시장이라는 경제적 제도가 보장하는 경제적 자유에 우선성을 부여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가 일찍 싹 텴던 서구국가에 있어서 자유주의의 발전은 한편으로 민주주의의 발전

을 가져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자유시장의 확산을 초래했다.

1930년대 밀어닥친 미국의 대공황은 자유시장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동한다. 케인즈(J. M. Keynes)는 '시장의 실패'에 대한 처방으로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였고,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은 케인즈의 처방에 따라서 뉴딜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뉴딜정책을 통해서 효과가 입증된 케인즈적 처방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의 전후 재건과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었으나, 1970년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과 유럽에서 새로운 경제공황이 닥치자 그 유효성을 의심받게 되었다. 자유시장이 지구화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국가의 위기, 포드주의의 위기가 논의되면서, 그 해결책으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축소하고 무한경쟁에 바탕을 둔 시장적 처방을 강조하는 하이에크식 경제적 자유주의가 추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를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라고 부른다.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는 애덤 스미스가 주창한 고전적인 경제적 자유주의의 부활을 20세기에 새롭게 시도한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자이다. 그는 케인즈주의가 지배했던 시절에는 별로 세인의 관심을 끌지 못하였으며, 이미 그 용도가 폐기된 자유시장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특이한 사람으로 인식되었었다. 하지만 그가 표방한 신자유주의가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의 근간이 되면서, 그는 미국경제와 영국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한 자유주의 철학자로 각광받게 되었다. 자유시장 옹호에 관한 그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점에 근거한다. 첫째,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전할 수 없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는 자신의 지식론에 입각하여, 지식의 완전성을 전제로 해서 국가

가 소위 시장의 실패나 시장의 불완전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은 무지의 소치이며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둘째, 그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각 개인의 개별적이며 경험적이며 구체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자생적인 질서가 수립된다는 자신의 질서론에 입각하여, 자유시장은 개인적 자유의 확장, 자율적인 사회적 규칙의 생성, 경제성장과 번영, 각 경제주체 사이의 유기적 시장관계로 인한 국내 평화 및 국제평화의 정착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지니는 긍정적인 측면은 이것이 정책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시대적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70년대 들어서구에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논해지고 이에 대한 처방으로 신자유주의가 부각되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모든 악의 근원으로 간주하며, 복지제도에의 의존이 만연되고 심화되면서 개인의 자율성 및 진취적 자립정신이 상실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장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부의 분배는 개인에게 자율성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정부의 실패'를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펼친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 경제가 회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신자유주의가 지니는 성공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역설적으로 풍요한 복지사회의 발달이 초래했던 다양한 생활양식, 다원적 문화, 제도화된 개인주의 등이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신자유주의가 라틴아메리카나 한국, 대만, 태국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서 전개되는 양상은 선진 유럽의 경우와는 판이하게 나타난다. 대처리즘과 레이거니즘에서 비롯된 '지구적 신자유주의'는 금융자본

의 세계화로 표상되는데,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선진국 또는 다국적 금융기관이 설정한 제약조건 하에서 시장적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구조적으로 강제되며, 이에 따라 '종속적 신자유주의'가 심화된다. 복지제도가 별로 발달하지 않은 가운데 시장의 생산기능의 활성화에 따른 '생산적 복지'의 증대를 강조하는 종속적 신자유주의는 분배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기 보다는 분배문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시장세력의 해방에 의해 만들어지는 끝없는 경제 성장에 걸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장한 것은 소수의 부자가 더욱 부유해질 수 있는 경제적 자유, 다수의 빈자가 더욱 가난해질 수 있는 경제적 자유로 나타났다. 복지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강조된 경제적 자유는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데 별로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구적 신자유주의에는 초래하는 득실과 명암은 각국이 처해 있는 자본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가 병행되어 발전해 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과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로의 회귀를 통해 손해보다는 이익을 많이 얻었다면, 이러한 병행적 발전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종속적 신자유주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라틴아메리카나 동아시아의 후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익보다는 손해를 많이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실패는 시장의 성공으로 많이 보완되었다면, 후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시장의 성공을 통해서 성장과 분배를 달성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는 이데올로기성 구호로 그치면서 시장과 정부의 동시적 실패로 귀결되는 경향을 강하게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이들 국가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던 정치적 자유주의와 경제

적 자유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가 되고 있다.

종속적 신자유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자유주의이외의 대안인 권위주의와 사회주의는 이미 그 효력과 매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후진 자본주의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세계시장의 질서 안에서 경제성장을 도모해야 할 필연성에 봉착해 있다. 종속적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자유주의의 핵심적 측면인 정치적 자유주의를 발전시킴으로써 해결돼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국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며, 국가가 중립성을 지킬 것을 요구한다. 국가의 중립성이란 야경국가처럼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의 다수가 요구하는 정책을 공동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을 의미한다. 시민의 자유, 다원성, 관용성, 입헌주의, 법치주의 등을 모토로 하는 정치적 자유주의가 확립되었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경제적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신자유주의는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지난 반세기는 케인즈의 시대였다면, 1980년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는 하이에크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케인즈의 처방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 약효를 잃게 되었듯이, 하이에크의 처방도 역시 역사의 어떤 시점에 가면 그 약효를 잃게 될 것이다. 하이에크의 처방이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플러스의 약효가 부작용으로 초래되는 마이너스의 약효보다 크다면, 하이에크의 처방을 받아들일 충분한 근거는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서 쓰면 된다. 고쳐서도 안 되면 새로운 처방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케인즈나 하이에크 모두 정치적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있는 사상가들이다. 케인즈나 하이에크의 처방이 실패했다고 해서, 정치적 자유주의가 파멸

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자유주의는 서로 대립적인 경제적 처방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 먼 훗날 역사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차대조표를 밝혀줄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치적 예지와 경제적 예지를 키워서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굳건히 하는 것일 게다.\*